

무전공 모집하라는데...광주·전남 대학은 고민 중

정부 '무전공 25%' 모집 사립대 최고 9억원 지원금 "인기학과 몰릴까 우려"... "대학 개혁 달성 기회로"

교육부의 무전공 입학생 확대 방침에 광주·전남 지역 대학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일 광주·전남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가 올해 치러질 2025학년도 입시부터 대학의 무전공 모집 비율에 따라 재정 지원에 차등을 두는 방침을 확정했다. 올해 입시에서 '무전공 25% 모집'을 실시하는 사립대라면 정부 지원금을 많게는 9억원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내용은 교육부의 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육성사업 기본계획에 담겼다. 무전공 선발은 전공 구분 없이 대학에 들어간 뒤

2학년 올라갈 때 자유롭게 전공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학생 입장에서는 전공 선택권을 보장 받는 효과가 있고, 대학은 시대나 기술 변화에 맞게 새로운 전공을 도입하거나 융합 학문 전공을 개설할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미래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는 첨단 분야에는 융합형 인재가 필요하는데 지금 대학의 경직된 학사 구조로는 그런 인재 양성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여기에 대다수 학생도 자신의 진로에 대한 충분한 탐색 기회나 시간도 없이 고교 내신등급과 대학

수능능력시험 점수에 맞춰 대학과 전공을 선택하고 있다. 문제는 교육부가 거점 국립대·국가 중심 국립대, 사립대의 경우 무전공 선발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대해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무전공 입학생 확대를 재정지원과 연계한 만큼, 오랜 기간 등록금을 동결해 온 대학들로서는 '올머겨자먹기'로 쫓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전남대는 TF를 구성해 무전공 선발 도입 시기, 학생 선발규모, 학과간 유·불리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무전공 입학의 취지에는 대부분 공감하지만 예상되는 부작용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좁은 취업문을 상대적으로 뚫기 용이한 전공에 학생들이 과도하게 쏠리면 인문학과 기초과학의 위기가 더욱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전남대 관계자는 "학교 안에서도 학과별로 입장이 많이 다른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며 "단적인 예로 기초학문 등 보호해야 할 학과를 고려해야 하고 구성원들의 여론도 수렴해야 하는 난제 중의 난제"라고 말했다. 이어 "전남대는 현재도 제한적으로 소수지만 자율전공학부에서 학생을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노후와 장·단점을 분석해 가장 적합한 방안을 찾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전남지역 대학들은 무전공 선발은 교육부의 글로벌 대학 선정과도 밀접한 사안인 만큼 피할 수 없는 과제로 보고 있다. 교육부가 비수도권 대학 30곳을 선정해 5년간 각 1000억원을 지원하는 '글로벌대학' 사업에서는 학교들이 앞다퉀 무전공 입학생 확대를 과제로 내세웠다. 조선대 관계자는 "지난해 글로벌 사업에 공모했

을 때도 학과간 벽 허물기 등 사실상 무전공 추진 방침을 제안하기도 했다"면서 "무전공, '학문·학과 간 벽 허물기'는 글로벌 사업의 핵심 현안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현안"이라고 말했다. 실제 전남대와 조선대의 경우 80여개 학과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무전공 선발은 자칫 특정 학과에 대한 살생부가 될 수 있다. 상경계열이나 컴퓨터 공학과 등 이른바 취업에 유리한 '인기 학과'로 학생들이 쏠리는 현상을 막기 어렵다는 점이다. 정부의 무전공 확대 방침을 대학발전의 기회로 삼겠다는 대학도 있다. 동신대 관계자는 "무전공 확대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해 대학 개혁을 달성하고 학교의 발전과 연계시킬 수 있는 최대 공약수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당신이 북구' 브랜드 선포식 1일 광주시 북구 양산동 북구문화센터에서 광주 북구 도시브랜드 선포식이 열렸다. 선포식에 참석한 문인 북구청장과 주민들이 도시 브랜드인 '당신이 북구' 뜻말과 예곡백을 들고 환호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법률 문턱' 낮춘다... '사법접근센터' 개소 광주법원 청사에 변호사회·신용회복위 등 상담 서비스

광주지방법원이 사회적 약자의 '법률 문턱'을 낮추기 위한 '사법접근센터'의 문을 열었다. 1일 광주지방법원은 장애인·외국인·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사법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관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고 사법접근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센터는 광주지방법원 청사 1층에 설치됐다. 센터에서는 법원 사무관인 사법지원관과 일반 민원 상담위원뿐만 아니라, 광주지방법원과 업무 협약을 맺은 광주지방변호사회, 광주전남법무사회,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신용회복위원회 광주지부, 한국공인노무사회 광주전남지역본부, 한국자산관리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 파견한 상담위원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을 원하는 민원인은 누구나 방문해 상담 창구 별로 대기표를 발급받아 순서대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과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는 우선 상담이 가능하다. 광주지방법원 홈페이지의 예약 시스템('민원 배너')을 통해 원하는 날짜로 상담 예약을 하고 방문할 수도 있다. 박병태 광주지방법원장은 "사법접근센터를 통한 통합적인 사법지원 서비스 제공이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성 강화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업무 협약을 맺고 사법접근센터에 참여해준 유관기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철회하라"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 기자회견

광주·전남 환경단체가 영광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람을 시작한 영광군(1월 30일자 광주일보 7면)에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1일 한빛핵발전소대응호남권공동행동(공동행동)은 영광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수원은 주민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한빛1·2호기 수명연장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영광군은 초안 공람을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최진기씨가 적용되지 않아 중대사고 평가·대안 검토, 주민 보호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초안에 대해 주민공람을 시작하면 지자체가 주민의 안전을 방기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공동행동은 "지난달 17일 한국수력원자력이 주민 공람을 하지 않고 초안을 보류 중인 4개(영

광·함평·고창·부안) 지자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영광군이 공람을 시작했다"며 "영광군은 지역 주민의 안전 보다 한수원의 압박이 더 무서운 것이냐"고 반문했다. 공동행동은 "전문용어로만 쓰여진 초안을 주민들이 이해하는 건 불가능하다"면서 "공람이 시작되자 벌써부터 한수원은 주민들에게 선물을 뿌리며 열람과 서명을 유도하는 등 눈속임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 관계자는 "고창군은 한수원의 소송 전에도 보완요청을 요구하며 공람을 연기하고 있다"면서 "한빛1·2호기 수명연장은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영광군도 한수원의 이익보다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인 기자 kdi@

"관행이면 책임 없나"...법정서 혼쫓 난 대리수술 의사들

광주지법 항소심 모두 기각 1심 의사면허 취소형 유지 "OECD가입국 중 우리나라 의사 연봉이 높은 이유가 뭘까요. 의사들이 잘 먹고 잘 살라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판사) 1일 광주지법 301호 형사법정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 선고를 하던 형사1부 김병호 부장판사는 목격한 어조로 질책을 이어갔다. 재판정에 선 광주의 모 척추병원 대표 원장 A(63)씨 등 의사 3명은 깊숙이 고개를 숙였다. 이들은 보건복지부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간호조무사 3명과 같이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1년 6월에 집행유예 2·3년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17~2018년 수술실에서 의사가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에게 13차례에 걸쳐 수술 봉합 처치 등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항소심에서도 "대리 수술 행위는 어쩔 수 없는 의료계 현실이자 관행이고, 단순 피부봉합으로 위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판사는 "사정이 없는 사람이 없고 정도의 차이만 있을뿐 관행이라는 이유로 개선을 하지 않는다고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리수술은)환자들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이나 책임이 없다는 생각은 잘못됐다"면서 "위험성이

적다고 위험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사회에서 의사들을 배려하고 많이 존중했으면 똑같이 의사도 환자를 존중해야 한다"면서 "기분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사는 자세가 중요하지 않겠느냐"고 의사들에게 되물었다. 재판부는 이들이 항소와 함께 제기한 위헌심판 제정을 기각하고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3명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같은 날 이번 재판과 별도로 A씨는 다른 공범과 함께 마취 전공 원장의 진료실을 무단 침입해 진료를 방해한 혐의(의료법위반 등)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1심의 무죄가 파기되고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정병호 기자 jusbh@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